

# 안덕근 “체코원전 금융 지원, 사실무근”… 경제회복 다짐

〈산업부 장관〉

## 산업부

체코 원전·동해 가스전 사업 공방  
동해 가스전 사업비 5년간 5761억  
1차공 시추 별도 “예타 대상 아냐”  
무역금융 확대로 수출 회복 견인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체코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 “체코 원전 입찰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로 파베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원전 투자 의향서 영어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며 “금융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

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 분석 자료를 인용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

조달, 시공사업을 해주는 것”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덤핑 수주’ 등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협상을 할 수 없다”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동해 가스전 사업 중 올해 12월 예정인 1차공 탐사시추에 드는 비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의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록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체코 원전과 관련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며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하반기에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구글-애플, 인앱결제·망사용료 도마 위… “공정경쟁 환경 조성해야”

## 방통위

구글·애플 반독점, 과징금 부과 지연  
이통 3사 담합 의혹, 해결책 모색  
김 직무대행 “공정위와 교통정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서 구글과 애플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은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SNS)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결제 금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한 셈이다.

◆빅테크 기업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해야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채택됐다.

최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인앱결제강제금지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바 있다. 이는 역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최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부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수료는 10% 내외에 불과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구글이 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 “단호한 규

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애플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망사용료 미지불 조치해야”

구글코리아가 국내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지난 2020년의 경우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었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방

통위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냐”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고 생각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로 인해 나서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지상파 재허가 추진”… 방송통신위원장 출석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마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정감사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의사를 밝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여당, 배추값 폭등 질타… 농식품장관 “이례적 폭염 탓”

## 농식품부

정부 농산물 대책에 대한 비판 고조  
송 장관, 수급 관리·가격 조사 대응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배추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고온현상이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된 탓에 배추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 예측이 빗나가 배추 값 등이 폭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금은 추석 때보다 배추가 포기당 2000원이나 더 비싸, 정부의 시장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추를 직접 집

어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며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쾌청아져서 추석 지나 준(準)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서 “이른바 ‘금배추’는 이미 8월부터 예견된 바 있다”며 정부의 농장대응론을 제기했

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 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27일 기준 9963원으로 1만 선까지 근접했다가 지난 4일 8848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최근 배추값은 여전히 작년 대비 30% 가까이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t)을 들여왔고, 이달 한 달간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를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자

재 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질타 및 정부발 대책 요구도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대책에 대해 묻자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을 오늘(7일)부터 3개월간 조사하면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다만 “쌀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해보다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